

[2023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유엔 지속가능발전 8년 평가, 2030년 달성을 위한 7년의 행동과제

2023. 5.



물



에너지



산업



도시



파트너십

도 서 명 | 2023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Copyright © 2023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All Right Reserved.

발 행 기 관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사무국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5층
전화. 02-706-6179 팩스. 02-3144-4709 이메일.
sdgnetkorea@gmail.com
홈페이지. www.sdgforum.org

발 행 일 | 2023. 5. 24.

출 판 기 관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5층
전화. 02-706-6179 팩스. 02-3144-4709
이메일. kicsd.re.kr@gmail.com 홈페이지. www.kicsd.re.kr

기 획 | 윤경호 (사)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dyoon@kfem.or.kr

편 집 | 박차옥경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상임이사 okparkcha@gmail.com

보 고 서 작 성 | (가나다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기후솔루션, 녹색교통운동,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한국장애포럼,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운동연합, SDSN Youth Korea(총 10개단체)

시민사회 보고서 작성 목적 및 방법

작성 배경 및 목적

- 매년 개최되는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에 대응, 정부의 유엔SDGs 이행을 촉진하고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작성. 시민사회단체 운동 관점에서 유엔SDGs 및 국가 SDGs 지표 이행 현황을 통한 정책제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보고서는 2017년 이후 7번째 발행
- 오는 7월 10일부터 열리는 고위급 정치포럼은 SDG6(물과 위생), SDG7(깨끗한 에너지), SDG9(산업 혁신과 인프라), SDG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SDG17(파트너십)에 대한 이행 현황 점검 예정. 이후 9월에 열리는 제2차 SDGs정상회의(유엔총회)를 통해 지난 8년 동안 글로벌 SDGs 이행 현황을 종합 검토한 후 2024~2030년까지 남은 6년의 긴급 행동 과제 도출 예정

작성 주체 및 방법

- 기간: 2023년 2월 ~ 5월
- 참여단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기후솔루션, 녹색교통운동,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한국장애포럼,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운동연합, SDSN Youth Korea(총 10개 단체)
- 작성 과정

월/일(요일)	주요 과정
2/15(수) 오후4시	보고서 작성 오리엔테이션
	↓
3/24(금)	1차 초안 마감
	↓
3월 27일(월) - 3월 31일(금) 오후4시	'2030 SDG 이행점검 시민사회 온라인 간담회'
	↓
4월 20일(목) 오후2시	'2030 SDG 이행점검 시민사회 오프라인 간담회'
	↓
5/22(월)	보고서 완성

- 통계 활용: 국제기구 및 정부 공인 통계 기본,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공 또는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자료 활용






작성 내용 및 구성

- 작성 내용

- 17개의 목표를 나누어 매년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고위급정치포럼의 올해 점검 목표의 세부목표와 지표 현황, 국가 주요 이행정책 현황, 이행현황 평가 및 방법, 해당 목표별 이슈와 현황 점검 후 시사점 및 정책제언 및 현장사례 제시

○ 구성 방식: 보고서 작성단체의 활동 분야에 근거하여 각 목표별 이행 현황 분석

〈시민사회보고서가 점검한 유엔 및 국가SDGs 세부목표 현황〉

SDGs	유엔 SDGs 세부목표	국가SDGs 세부목표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6.3 2030년까지 수질 개선	6-3 수질오염 물질의 수계 유입 최소화, 수질개선 담보
	6.4 지속가능한 담수 인출 및 공급	6-4 물공급 안정성 도모를 위한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
	6.5 2030년까지 통합된 수자원 관리 이행	6-5 수생태 건강성 회복, 다양성 확대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7.2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상당 수준 증대	7-2.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공급 증대
	9.3 개발도상국에서 소규모 사업체와 기타 기업의 금융 서비스 접근 향상	9-2 산업 다양성 추구,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기반 마련으로 산업경쟁력 확보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9.4 자원 이용 효율성 향상	9-5 환경친화적인 산업 활동 등으로 자원효율성이 높은 산업화 추진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충분하고 안전하며 적정 주택 및 기초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빈민가 개선	11-1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 및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11.2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 수요의 특별한 주의 속에서 대중교통 확대를 통한 도로안전 개선,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접근 제공	11-2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교통 시스템 제공 및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고려한 대중교통 확대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 확대, 참여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계획 및 관리역량을 강화	11-3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
	11.7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가능한 녹색 및 공공장소 제공(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11-7 모든 이에게(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 포함) 안전하고 용이한 공공 녹지공간 접근 보장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17.2 ODA 제공 국가는 적어도 GNI의 2.20% 제공 목표 고려 권장	17-1 ODA 확대, 개발자원 다양화
	17.14 정책일관성	17-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
	17.17 민관파트너십	17-7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한계와 과제

- 올해 처음으로 종합적이고 포용적인 평가를 위하여 시민사회보고서 작성단체와 숙의토론 과정 진행, 단체별 활동 내용을 SDGs와 연계하는데 많은 시간 할애
- SDGs 이행점검체계의 기본 취지인 다양한 정보·지식과 관점을 상호 교차시켜 통합적인 시각과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일부 미흡
- 반면, 일부 목표의 경우 여러 단체가 함께 보고서를 검토하고 연명한 것은 긍정적

유엔 SDGs 이행 평가 및 향후 7년의 과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확산과 현실적 한계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며 국제사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하 SDGs)를 채택한지 벌써 8년이 지났다. 2023년은 SDGs의 달성 기한인 2030년까지 이제 절반이 남은 시점이다. 우리는 지금 지속가능한가?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지속불가능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기후위기, 사회적 양극화, 청년실업, 저출생, 인구고령화, 지방소멸 등 산업화 시대의 고도성장기에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가 꼬아 터지고 있다. 세대간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 풀어야 할 정치계는 권력다툼에만 집중하고 있다.

2015년 유엔 SDGs가 채택된 후 한국사회도 SDGs 이행과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 2021년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2022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했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시행은 미흡하다. 시민이 체감하는 긍정적인 변화보다 오히려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지속 불가능성의 나락에 빠진 대한민국

SDGs 비영리 민간 정책연구기관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SDSN)는 UN SDGs 17개 목표에 대한 국가별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지속가능발전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를 발표한다. 전 세계 163개국의 이행현황을 살펴 본 2022년 보고서에서 “행복은 성적순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27위로 조사되었다. 성평등(SDG5), 불평등 완화(SDG10), 기후위기 대응(SDG13), 해양 생태계 보호(SDG14), 육상 생태계 보호(SDG15)를 위한 목표 달성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무역과 공급 사슬을 통해 어떻게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유발하는지를 평가하는 국제 파급효과 지수(International Spillover Index)는 71.6점으로, OECD 국가 평균(70.1)과 유사하게 사회경제적,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DSN이 첫 평가보고서를 발간한 2017년 이후 우리나라는 5번 성평등, 13번 기후위기대

응, 17번 파트너십은 계속 취약한 목표로 조사되었다. 이 중 기후위기 대응(SDG13), 육상생태(SDG15)는 해를 거듭할수록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성평등과 불평등 해소가 계속 취약한 목표로 평가된다. 수출 중심의 산업 기반을 가져 온 실가스 다배출 국가로 지목받지만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은 요원하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졌지만 생태환경은 개발 중심의 정책 속에 더욱 열악한 상황이 되고 있다.

연도	순위/국가 수	취약한 목표	악화 추세
2017년	31위/157개국	5, 8, 13, 15	-
2018년	19위/156개국	5, 13, 17	13, 15
2019년	18위/162개국	5, 13, 17	13, 15
2020년	20위/166개국	5, 10, 13, 17	15
2021년	28위/165개국	5, 10, 13, 14, 15, 17	15
2022년	27위/163개국	5, 10, 13, 14, 15, 17	14

SDSN의 지속가능성 보고서(2017~2022년)

5(성평등), 8(양질의 일자리), 10(불평등 해소), 13(기후변화대응), 14(해양생태계 보전), 15(육상생태계 보전), 17(파트너십)

출처 : <https://www.sdgindex.org/>



UN SDSN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우리나라 대시보드 결과(2022년)

지속가능성을 무시하는 정부 정책 방향

앞으로 남은 7년 동안, 우리의 지속가능성은 나아질 수 있을까? 지난 5월 9일, 한국의 주요 시민단체, 노조, 종교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에 따르면 앞서 지적한 불평등, 기후위기, 생태환경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 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반서민 친재벌 부자 정책에 따른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 자산 불평등의 심각과 소득격차의 악화
-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 재벌 대기업과 자산가를 위한 부자 감세 및 부동산 등 무분별한 규제 완화
- 대책 없는 감세와 긴축 재정에 따른 복지, 민생안정 정책의 축소 우려
- 실질임금의 하락을 반영하지 못한 복지 예산, 대폭 삭감된 공공 임대주택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 축소 시도 등
- 돌봄, 요양,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민간화, 영리화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둘째, 한반도 전쟁 우려에 대한 문제이다.

- 남북 사이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군사적 긴장이 날이 갈수록 팽배
- 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천명에 따른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한미 확장억제와 선제 공격 전략 강화 등 추진
- 미중 갈등과 진영화, 동북아시아의 신냉전적 대결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편승해 위기 심화

셋째,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심화이다.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의 30.2%에서 21.6%로 낮추었으며 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하향 조정과 신규 석탄 발전소의 건설
- 수명이 다한 원전 10기를 충분한 안전성 점검 없이 가동 기간을 연장
- 2030년부터 원전 내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는데도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 부지 마련 대책은 부실
- 자연보호구역의 해제, 4대강 사업 이후 폐해를 무시하고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 및 보존치

캐비닛에 잠자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정부의 정책에는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십여 년 넘게 논의를 거쳐 전 국민적 열망을 반영해 제정한 법이지만, 여전히 지속가능발전은 단순히 '키워드'에 불과하다.

주무부서인 국무조정실은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은 전혀 없고 기본 방향조차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외교부, 환경부, 통계청을 제외하면 지속가능발전 정책이나 SDGs는 허울 좋은 표어에 불과하다. 2021년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수립했지만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다른 부처에게 '지속가능발전'은 현재 고려사항이 아니다.

법 시행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구성도 되지 않았다. 기본법에

명시된 기본전략은 차기 전략을 수립할 때까지 4차 기본계획으로 한다지만, 추진계획은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지속가능성 사전평가제, 각 정책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숙의공론화장은 법에만 존재하는 허구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대해 제대로 신경도 쓰지 않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담당하는 국회는 법 제정이 끝나자 역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다.

SDGs 달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전략

우리가 직면한 지속 불가능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변화를 넘어 변혁이 필요하다. 현재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저성장시대의 생존전략으로 모든 세계가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다. SDGs는 단순히 최빈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개발 원조를 위한 방안이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지속 불가능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정부는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다시 방향을 설정하고 노력해야 한다.

첫째, 유엔 SDGs의 달성과 이행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SDGs는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을 근절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한다. 목표 이행을 위해 모든 국가와 이해당사자들은 협력적인 파트너십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SDGs는 인류를 빈곤과 결핍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지구를 치유하며 보호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위해 변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는 이 의제의 규모와 포부를 나타내고, 인권과 성평등, 여성과 여아의 권익 신장을 추구한다. 경제, 사회, 환경의 세 가지 차원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한다. 이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곧 우리 사회의 지속 불가능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변혁적 과정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이행, 후퇴하는 목표 중심의 재원 마련, 관련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SDGs 달성을 위한 부처별 노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은 유기적인 상호 연계를 고려한 넥서스(Nexus) 전략이 필요하다. SDGs의 17개 목표는 각 분야별로 목표와 지표를 통해 기본적인 수준을 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개별 목표가 각자 달성되어서는 SDGs를 달성할 수 없다. 서로 시너지를 내야만 작동하는 목표들이 존재한다. 넥서스(Nexus)라 불리는 '연계 접근법'은 각 분야의 최소 한계를 고려하되 전체적으로 최적의 결과를 내고자 하는 접근법이다.

예를 들어, 물, 에너지, 식량의 관계에서 안정적인 물 공급은 에너지와 식량을 생산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습지를 없애버리면 수자원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 따라서 개별 목표에 대한 접근이 아닌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중앙-지방에 대한 협력 및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는 계획의 수립,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지속

가능성 사전검토제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 이행을 통한 SDGs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목표 달성을 위해 숙의공론화장 운영은 필수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국가는 정부간 협력체계 속에 이해관계자 참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숙의공론화장을 통해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정부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고, 포용성과 통합적인 해결책 도출을 위해 국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SDGs 이행 과정과 성과가 지속가능발전 정보망을 통해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




넷째, 자발적 국가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을 제출해야 한다. 유엔은 2013년 7월 9일 총회 결의안 67/290에 따라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한다. 회원국은 2030년까지 최소 2회 이상 SDGs 이행 현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VNR은 정부 주도로 이뤄지며 주요 그룹 및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6년 처음 제출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VNR을 제출하지 않았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2회 이상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아쉬운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정부는 VNR을 작성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다섯째, 포스트 2030 의제의 협상과정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SDGs의 등장과 이행을 위한 과정 속에 절반의 시간이 흘렀다. 남은 7년의 시간에 당면한 숙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다음 의제 설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과 함께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전의 발전 방식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방향을 찾는 변혁적 시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길을 바로 ‘지금’ 가야 한다.

2023 점검목표 이행 현황
: SDG6 · 7 · 9 · 11 · 17
이행점검 목표별 주요내용

〈2030 고위급정치포럼의 이행 점검 목표에 대한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

SDG	주요 이슈	정책제안
	1. 무분별한 하천 개발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대강 보 개방과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통한 상수원 수질(녹조 저감 등) 개선 필요 조류경보제 강화, 국민건강을 고려한 녹조 독소 관리제도 확립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관련 예산 확대 편성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위한 물순환율 지표의 조속한 확립
	2. 불균등한 지역별 1)우수율 관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시설 설치·운영관리 중장기 계획에 대한 수치화된 국가 공동 목표 설정 및 구체화된 이행평가 방안 제시 지역별 상수도 관리 전문가 육성 및 장기 근무형 보직 신설을 통한 전문성 제고 지역 주민의 상수도 관리 관심도 향상을 통해 지자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상수도 유지·관리 시와 군 단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상수도를 광역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
	1. 역행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는 2030년 국내 총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40% 이상으로 상향 태양광발전소 입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이격거리 완화 및 폐지를 통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 잠재량 확보 지방정부 및 중앙부처(산자부, 국토부)가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대한 현황 및 활용계획 수립, 유휴부지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 확보 정부가 주도하여 해상풍력 발전단지 입지를 조성하는 법을 통해 해상풍력에 대한 예측가능성 상향 필요 해상풍력의 인허가를 간결하게 진행하는 법제정을 통해 지역갈등 해소 및 사회적 비용을 감소, 해상풍력 보급속도를 증진
	1. 지속가능발전 목표 없는 문화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 기후위기(탄소중립) 등의 가치를 반영한 국가 단위 문화정책 비전 수립 및 추진 체계(협력적 거버넌스) 제도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문화적 접근 실질화, 문화정책 및 문화분야 K-SDGs 이행 계획·지표 수립 지속가능 목표 전략(지속가능 프레임 워크)관련,

		<p>문화체육관광부의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계획의 혁신과 실질화 추진 : 문화다양성 목표 설정과 지표 체계, 평가 제도 제도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산업)과 관련하여 문화다양성, 이산화탄소 배출, 폐기물 재활용 비율 등 지표 적극 도입,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제도화, 문화산업 관련 지속가능 지표 개발 및 적용 활성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목표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관련, 문화산업 분야 이행 계획 수립(문화다양성, 이산화탄소 배출, 폐기물 재활용 등)
	<p>1. 계속되는 지역사 회 내 장애인 배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및 가이드라인 적용 : (1) 시설 소규모화, 전원조치, 신규 입소 및 신규설치 등 모든 종류의 시설화 금지 (2) 법적능력회복 및 의사소통지원 등을 포함하여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정, 탈시설지원법 즉각 제정 개인별 서비스(주거, 활동지원 등) 수립 의무를 즉시 이행하고, 충분한 예산 마련 모든 도시에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현재 운행되는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규정 마련 등), 장애인 대중교통 접근성 도시별 격차를 해소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영 및 광역이동을 전국적으로 보장 장애인의 도시 간 이동을 위한 시외·고속버스 모델 개발, 노선 증설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p>2. 내나라! 공공임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적정거처 거주 인구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한 달성 목표 및 시행계획 마련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구체적인 달성 목표 설정, 시행계획 마련 비적정거처 재개발 시, 임차 가구의 재정착을 보장하는 도시개발계획 방침 마련 물가상승, 주택가격상승을 반영하여 주거급여 집행예산 확대 수준의 적절성 파악 및 구체적인 달성 목표 설정에 따른 시행계획 마련 주택 임차 가구 보호 체계 마련
	<p>3. 대중교통·자전거 등 지속가능 교통으로 전환 노력 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특성에 적합한 대중교통 공급 확대 기후변화 대응,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제도 도입 도로공간의 변화(Re-spaceing)를 통한 자전거 도로 확보 자전거-대중교통 환승시설 확대
	<p>4. 지속 불가능한 도시관리와 말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 및 지역·도시 공간의 성장 관리 원칙 천명 및 제도의 전면 재정비

	인 시민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시민참여 및 시민사회 참여 방안을 강구하는 법제도 정비 및 도시계획 행정 집행 • 유엔 지표 11.3.1과 11.3.2의 지향점과 다른 현재 국가 SDGs의 지표를 '국토 면적 대비 토지이용 면적'과 같은 적절한 지표로 변경
	1. 청년 참여정책 제도 기반 여전히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자문단 선발·활동·성과에 대한 정보공개 • 청년 전반의 포용성 있는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공론장 재편 • 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인지도 향상 및 취약계층 청년 대상 정책 전달·지원 기능 적극 수행 • 온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접근성 향상, 통합적 운영 및 정책 사업 모집·신청 기능 재편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이행을 위한 행정체계 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DGs 달성을 위한 국가 책무 구조 실행력 확보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의 영향도를 분석, 측정, 소통하는 정교하고 민감한 도구 강화(제도 개선 및 실행 방안 추진) •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과 지방 기본전략의 연계성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지원 및 연계 활성화 방안 추진
	3.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추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까지 확실한 ODA 증액 목표 달성 전략 수립 • 무상원조 비중 및 비구속성 원조 비율 증대 계획 수립 • 최빈개도국에 대한 순 ODA 비율 목표 및 구체적 이행 방안 수립 • OECD DAC 정부-시민사회 협력 예산 평균(14%)의 절반 수준 이상으로 목표 확대 제시

1) 정수장에서 생산하여 공급된 수돗물의 총수량(생산량) 중에서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을 의미하며, 유수율이 높다는 것은 상수 보급 과정에서 손실되는(누수된) 수돗물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

각 목표별 현황 및 정책제안



무분별한 하천 개발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 악화

○ 국내 정책이행 현황

- 2021년 수도물 서비스 만족도 58.3%, 수도물 음용률 36%
- 녹조 경보지점 확대(29→37개), 조류독소 감시(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조류경보제 개선 예정
- 조류독소 관리 강화를 위해 감시항목 1종(마이크로시스틴-LR)에서 총 마이크로시스틴으로 강화, 분석항목 기존 4종에서 6종으로 확대(-LR, -RR, -YR, -LA 4종 → -LY, -LF 포함 6종) 예정
- 2020년 서식 및 수변환경 평가지수(HRI) 52.2(C 등급), 어류건강성 평가지수(FAI) 54.1(C 등급)

○ 주요이슈 및 과제

- 4대강 유역 녹조 오염으로 인한 수질 악화에 따른 국민 건강 위협
 - 4대강사업 이후 매년 여름 녹조 대발생 반복, 원수 수질에 대한 신뢰 하락
 -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 녹조 관리 부실로 수도물, 농작물, 공기 중에서 녹조 검출
- 무분별한 하천 개발로 인한 하천 생물다양성 위기
 - 하천 구조물 관리 부실로 하천 연속성 단절
 - 관련 예산 축소 등 정책 이행 노력 부족으로 서식 및 수변환경 평가지수(HRI) 및 어류건강성 평가지수(FAI) 지표 지속 하락세

○ 정책제안

- 4대강 보 개방과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통한 상수원 수질(녹조 저감 등) 개선 필요
- 조류경보제 강화, 국민건강을 고려한 녹조 독소 관리제도 확립
-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관련 예산 확대 편성
-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위한 물순환율 지표의 조속한 확립



지속가능한 수도사업의 미래 / 통합 유수율 관리의 필요성

○ 국내 정책이행 현황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12년간 노후상수도 정비에 3조962억원(국고 1조 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2021.1., 환경부)에 따라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의 경우 국고 50~70%를 지원하며 수도요금 현실화, 운영관리 효율화를 고려하여 지원 평가
- 지방상수도 운영사업자와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유수율 개선, 상수도 요금 현실화노력, 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 등을 평가

○ 주요이슈 및 과제(Key Issues & Challenges)

- 국가 우수율 공동 목표의 부재와 지방 상수도 효율성 저하에 따른 지역별 우수율(서울특별시 95.7%, 제주도 51.8%) 격차가 큼
- 지자체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시의적절한 시설 관리 미흡

○ 정책제안

- 수도시설 설치·운영관리 중장기 계획에 대한 수치화된 국가 공동 목표 설정 및 구체화된 이행평가 방안 제시
- 지역별 상수도 관리 전문가 육성 및 장기 근무형 보직 신설을 통한 전문성 제고
- 지역 주민의 상수도 관리 관심도 향상을 통해 지자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상수도 유지·관리
- 시와 군 단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상수도를 광역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



역행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 국내 정책이행 현황

- 2021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3,668GWh로 1차에너지 대비 공급비중은 2021년 3.8%에서 0.3%p 증가한 4.1%이며, 총 발전량 대비 비중은 6.41%에서 0.74%p 증가한 7.15%임.
-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오던 신규 태양광발전소 보급량이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음.
- 해상풍력 보급목표는 12GW이나, 현재까지 보급 용량은 124.5MW로 1%에 불과함.

○ 주요이슈 및 과제

- 제 10차 전력기본계획에 의해 발표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1.6%로 2021년에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30.2%보다 하향 설정되어 재생에너지 공급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과학적 근거 없는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이격거리 조례 설정으로 인해 태양광발전소를 위한 입지가 1%도 안 되는 지역이 발생하고, 태양광시장 잠재량이 현저하게 감소함.
-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대한 현황조사가 부재해 유휴부지 등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계획을 세울 수 없음.
- 민간 주도로 진행되어 온 국내 해상풍력 개발은 입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어렵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함.
- 국내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은 최대 10곳의 관계부처에서 29가지의 법률에 적용받아야 하는 복잡한 구조로 인해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짐.

○ 정책제안

- 정부는 2030년 국내 총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4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함.
- 태양광발전소 입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이격거리 완화 및 폐지를 통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 잠재량을 확보해야 함.
- 지방정부 및 중앙부처(산자부, 국토부)가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대한 현황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유휴부지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을 확보해야 함.
- 정부가 주도하여 해상풍력 발전단지 입지를 조성하는 법을 통해 해상풍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함.
- 해상풍력의 인허가를 간결하게 진행하는 법제정을 통해 지역갈등 해소 및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해상풍력 보급속도를 높여야 함.



지속가능 목표없는 문화산업

○ 국내 정책이행 현황

-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 목표 관련 정책 연계는 매우 미비한 상황
- 문화 현상의 경우 지속가능성, 기후위기, ESG 등 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지만 정부 차원의 문화적 접근과 계획은 부재한 수준
- K-컬처(한류)의 세계화와 더불어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 지속가능 목표와 관련하여 문화산업에 대한 연계성과 계획 수립이 부재한 상황
- 지속가능 목표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이 유일한 관련 정책이지만, 이 역시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윤석열정부의 집권 이후 문화다양성, 표현의 자유, 거버넌스 등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조차 크게 퇴행하고 있는 상황

○ 주요이슈 및 과제

-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가능 목표 이행 전략과 관련하여 문화(산업)적 가치·효과에 대한 정책·제도화가 시급함
- 문화산업 관련 지속가능 지표 개발 및 적용 활성화 필요

○ 정책제안

- 지속가능성, 기후위기(탄소중립) 등의 가치를 반영한 국가 단위 문화정책 비전 수립 및 추진 체계(협력적 거버넌스) 제도화
-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관련하여 문화적 접근을 실질화하고, 문화정책 및 문화분야 K-SDGs 이행 계획·지표 수립
- 지속가능 목표 전략(지속가능 프레임 워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계획의 혁신과 실질화 추진 : 문화다양성 목표 설정과 지표 체계, 평가 제도

제도화 추진

- 문화(산업)과 관련하여 문화다양성, 이산화탄소 배출, 폐기물 재활용 비율 등의 지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제도화 문화산업 관련 지속가능 지표 개발 및 적용 활성화
-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중 '목표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관련하여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이행 계획 수립 : 문화다양성, 이산화탄소 배출, 폐기물 재활용 등



계속되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 배제

○ 국내 정책이행 현황

- 공공임대주택 공급 2021년 327만호
- 저상버스 도입률 2021년 30.6%

○ 주요이슈 및 과제

- 한국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2041년 마무리 이후에도 여전히 1만여명 이상의 시설 거주 지속
- 저상버스 도입률 30%에 불과하며 장애인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도입된 특별교통수단 역시 도농격차 극심
- 장애인 이동권 등 권리 보장 촉구 행동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탄압으로 정당한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 정책제안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및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1) 시설 소규모화, 전원조치, 신규 입소 및 신규설치 등 모든 종류의 시설화 금지 (2) 법적능력회복 및 의사소통지원 등을 포함하여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정하고, 탈시설지원법 즉각 제정
- 한국 정부는 개인별 서비스(주거, 활동지원 등) 수립 의무를 즉시 이행하고, 충분한 예산을 마련
- 모든 도시에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여(현재 운행되는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규정 마련 등) 장애인 대중교통 접근성 도시별 격차를 해소
-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영 및 광역이동을 전국적으로 보장할 것
- 장애인의 도시 간 이동을 위한 시외, 고속버스 모델을 개발하고 노선을 증설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 국내 정책이행 현황

- 현재 한국의 SDGs 세부 목표와 지표에서는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만을 지표로 산정하고 있어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을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행 현황을 파악하기에 부족함이 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05년 253.6만 가구에서 2015년 156만 가구로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지옥고((반)지하, 옥상(옥탑),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 규모는 2005년 69.5만가구에서 2020년 85.6만 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 예산은 2023년 기준 전년대비 5조 원이 삭감됨.
- 주거급여를 위한 정부 예산은 2023년 기준 2.57조 원으로, 정책 대상은 현행 중위 46% 이하 가구에서 46% 이하 가구로 확대되었으며, 지급되는 주거급여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전년대비 3천원 인상됨.

○ 주요이슈 및 과제(Key Issues & Challenges)

- 주택 이외의 거처 등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비적정 거처가 밀집한 지역을 일괄적으로 통합 철거하고 고가 주택 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재개발 계획이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음. 그 과정에서 빈곤층, 임차 가구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은 적절히 고려되지 않고 주거 안정성이 낮은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대출 및 이사비 지원에 그치고 있음. 주거 안정성이 낮은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대출 및 이사비 지원에 그치고 있음.
- 2022년 8월 반지하 폭우 참사 이후 기후위기시대에 보다 취약해지는 비적정주거 거주 임차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의 필요가 대두되었으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은 오히려 5조 원 감축되었고, 주거급여는 단 3천원 인상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정부는 공공임대와 주거급여 지원보다 대출 위주 주거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다수의 임차 가구는 민간임대시장에서 전월세 세입자로 살아감. 최근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주택 임차 가구에 대한 보호 체계가 부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보증금을 잃은 채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피해 세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정책제안

- 비적정거처 거주 인구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한 달성목표 및 시행계획 마련
-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구체적인 달성목표 설정 및 시행계획 마련
- 비적정거처 재개발 시, 임차 가구의 재정착을 보장하는 도시개발계획 방침 마련
- 물가상승, 주택가격상승을 반영하여 주거급여 집행예산 확대 수준의 적절성 파악 및 구체적인 달성목표 설정에 따른 시행계획 마련
- 주택 임차 가구 보호 체계 마련

대중교통·자전거 등 지속가능교통으로 전환 노력 부족

○ 국내 정책이행 현황

-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한 대중교통·자전거 이용 확대 정책은 실제 확대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음.
 - 2020년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32.6%로 2021년 35%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2021년 저상버스 보급율은 30.6%로 2021년 42.0%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자전거 수단분담율은 2017년 목표 설정 이후 분담율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주요이슈 및 과제(Key Issues & Challenges)

- 수도권에 대중교통의 공급이 집중되는 현상 지속, 지방 대중교통 이용율 하락
- 교통약자 편의시설의 부족
- 자전거 정책 관리, 추진의 부족

○ 정책제안

- 지역 특성에 적합한 대중교통 공급 확대
- 기후변화 대응,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제도의 도입
- 도로공간의 변화(Re-spaceing)를 통한 자전거 도로 확보
- 자전거-대중교통 환승시설 확대

지속 불가능한 도시관리와 말뿐인 시민 참여

○ 국내 정책이행 현황

- 국내 지표 부적절성, 지표 평가 불가

○ 주요이슈 및 과제(Key Issues & Challenges)

-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토 공간의 지속적 이용 확대만 고려하고 성장관리 관점의 도시계획 규제 및 지속가능한 이용의 개념 부재
- 형식적인 시민참여 제도는 있으나 실질적인 시민참여 또는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자체 불가능한 도시계획 행정의 운영 및 집행

○ 정책제안

- 국토 및 지역·도시 공간의 성장 관리 원칙 천명 및 제도의 전면 재정비
- 실질적인 시민참여 및 시민사회 참여 방안을 강구하는 법제도의 정비 및 도시계획 행정의 집행
- 유엔 지표의 11.3.1과 11.3.2의 지향점과 다른 현재 국가 SDGs의 지표는 '국토 면적 대비 토지이용 면적'과 같은 적절한 지표로 변경할 것을 제안



청년 참여 제도기반 여전히 미흡

○ 국내 정책이행 현황

- 2020년 2월 청년기본법 제정 및 2020년 8월 시행
- 청년기본법에 기반하여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음

○ 주요이슈 및 과제(Key Issues & Challenges)

-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설치된 9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 및 확대하기 위한 청년자문단이 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기구의 선발·활동·성과에 대한 정보 공개 부재
- 청년자문단 외 전체 청년 세대의 의견 수렴 기회 미흡
- 정책이 수요자인 청년에게 적극 전달되지 않는 상황으로 청년 세대의 청년정책 인지도가 저조하며 특히 청년정책 전달에서 지역별 불균형 존재
- 청년정책 전달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한정적 기능으로 정책 사업에 대한 모집과 신청, 관리 등의 확장적 운영 불가

○ 정책제안

- 청년자문단의 선발·활동·성과에 대한 정보공개
- 청년 전반의 포용성 있는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공론장 재편
- 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인지도 향상 및 취약계층 청년 대상 정책 전달·지원의 기능 적극 수행
- 온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접근성 향상, 통합적 운영 및 정책 사업 모집·신청 기능 재편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이행을 위한 행정체계 미구축

○ 국내 정책이행 현황

- 2022년 7월부터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 추진 중(4대 전략, 17개 목표, 119개 세부목표, 국가 지속가능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236개 지표)

○ 주요이슈 및 과제(Key Issues & Challenges)

-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했으나, 전국 현황도 파악하고 지원해야 할 국무조정실의 실무인력은 2-3명으로 국 매우 취약함
- 또한, 4월 현재까지 법이 정한 대통령 소속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국가위원회)’, 국가위원회 심의 사항에 관해 전문적인 검토를 해야 할 ‘전문위원회’, 정부 부처의 ‘지속가능발전 책

임관'도 지정하지 않음.

-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개정하고 있음
- 지역의 자발적인 노력에 비해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이행 의지를 확인할 수 없음

○ 정책제안

- 지속가능발전법이 정한 행정체계 구축 및 시행
- 국가차원의 SDGs 달성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및 이행 가속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추진 필요

○ 국내 정책이행 현황

- 2021년 이후 ODA/GNI 목표 부재하며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019년 3.2조원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 추진 목표 수립
- 무상원조 비율을 60%로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조정
- 비구속성 비율(유상 60%, 무상 95% 이상) 확대
- 최빈개도국에 대한 순 ODA 비율의 정확한 목표 부재
- 2023년 시민사회 협력 예산은 479억원으로 양자간원조 예산의 1.3%

○ 주요이슈 및 과제

- 2021년 ODA/GNI 실적이 0.16%로 OECD DAC 평균인 0.3%의 절반 수준임. 정부는 잇따른 ODA/GNI 비율 달성 실패 후, ODA 목표를 2019년 기준 2배 이상 증액으로 기준을 변경함. 국제사회의 합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기에 소극적 이행으로 평가함. 또한 K-SDGs의 목표(ODA/GNI 0.3%)와의 통일이 필요함.
- ODA의 양적 규모 확대와 함께 질적인 제고를 위해 무상원조와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 증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원조 분절화 극복 방안 필요
- 최빈개도국에 대한 순 ODA 비율 목표 및 구체적 이행 방안 필요
- 시민사회는 2025년까지 정부-시민사회 협력 예산을 OECD DAC 정부-시민사회 협력 예산 평균(14%)의 절반 수준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예산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제시를 꺼리는 상황임.

○ 정책제안

- 2030년까지 확실한 ODA 증액 목표 달성 전략 수립
- 무상원조 비중 및 비구속성 원조 비율 증대 계획 수립
- 최빈개도국에 대한 순 ODA 비율 목표 및 구체적 이행 방안 수립
- OECD DAC 정부-시민사회 협력 예산 평균(14%)의 절반 수준 이상으로 목표 확대 제시